

가업 상속세 부담 완화되나?

당정, 이번주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이번주 발표

가업 사후관리 기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추진

업종 변경 범위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키로

정부가 가업을 이어받는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업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이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업종 변경 범위를 확대해 상속인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이번주에 발표하기로 하고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마지막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물려받는 자녀에 대해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 기업을 상속할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

주고 있다. 가업을 유지하는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2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이 공제된다.

하지만 상속인이 가업 상속세를 공제받은 경우 10년 동안 휴업과 폐업을 해서는 안 되며 업종 변경 금지, 기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금지, 지분 100% 유지, 고용 100% 유지 등을 지켜야 한다. 이런 이유로 경영계에서는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개편안에는 상속 이후 가업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사이에서는 5년으로 단축하는 의견도 있었다. 상속공제 한도액은 500억원을

유지할 전망이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만 허용했던 업종 변경 범위는 '중분류'로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밀가루를 활용하는 제분업이나 제빵업 등이 소분류라면 식품품 제조업은 중분류에 해당한다. 지금은 제분업에서 제빵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개편 후에는 가능해지는 것이다.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규정된 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여부는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 간의 이견이 있어 조율 중이다. 정부는 가업상속 공제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부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부의 세습'으로 비칠 수 있어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4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매출액 3000

억원 미만 대상과 500억원 공제 한도액에 대해)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여당 내부에서는 연 매출액이 5000억원 또는 7000억 미만 기업으로 상속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상 기업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가업 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 개선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최은열 의원은 뉴시스에 "기업 활성화 위해 과감히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5000억원이나 7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상속 후 고용 100% 유지 규정을 조정할지도 쟁점 사항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스마트팩토리를 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건 상충된다"면서 "전체 인건비를 조항해 고용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최종 결정해 추후 개편안을 발표한다. /뉴시스



'국민께 힘 되는 일 잘하는 공무원' 초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민께 힘이 되는 일 잘하는 공무원' 초청 오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정숙 보건복지부 예비급여와 서기관, 문재인 대통령, 신원봉 상임위원 통상분쟁대응과 정하늘 과장, 고성민 전 사무관, 김현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노영민 비서실장, 최희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 사무관.

靑, 김원봉 언급에 "메시지 핵심은 통합... 서훈 수여는 별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산 김원봉' 언급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는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통합으로 가자는 취지이고, 그 취지에 대한 역사적 사례를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7일 춘추관에서 "추념사의 핵심 메시지는 애국 앞에서 보수와 진보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시정부도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만들어졌고, 백범 김구 선생께서도 모두 함께 하는 대동단결을 주창한 바 있다"며 "(문 대통령이) 독립 과정에 있었던 김원봉 선생의 역할을 통합의 사례로 예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원봉을 '국군 창설의 뿌리' 처럼 언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비약"이라며 "(추념

사의) 맥락을 보면 통합된 광복군이 국군 창설의 뿌리이고 한미 동맹의 뿌리가 됐다고 분명하게 얘기했다"고 반박했다.

김원봉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서훈 수여 여부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김원봉 선생에 대한 평가는 역사학계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대통령의 발언과 서훈은 별개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북발전 미래비전 제시
박주현 의원, 익산 공무원 대상 전주광역시 추진 등 5가지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민주평화당 전북회맹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비례대표) 의원이 익산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북발전 5대 비전'을 제시했다.

박주현 의원은 지난 7일 송리문화예술회관에서 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전북발전을 위한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등 5대 비전을 설명했다.

박 의원이 소개한 전북발전 5대 비전은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전주와 익산·완주를 아우르는 전주광역시 추진, 실버시티 조성, 새만금항 식품무역항 조성,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 등이다.

특히 박 의원은 정주가 갖고 있는 지명브랜드와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인 익산의 이점, 완주의 넓은 토지를 더한 전주광역시 추진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진성 기자



도의회 상임위 현장의정활동 나서

문건위, 농어촌 임대주택 건설현장 등 방문
행자위, 완주 자원봉사센터 현장 목소리 청취

전북도의회 상임위가 지난 7일 제364회 정례회 기간에 현장의정활동에 나섰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이날 진안 농어촌 임대주택 건설현장과 가위박물관 및 명인명품관을 차례로 방문,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정호윤 위원장과 위원들은 우선 농어촌 임대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듣고 공사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돼 무주택 서민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제공,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전북투어패스 자유이용 가맹점도 쟁점 사항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스마트팩토리를 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건 상충된다"면서 "전체 인건비를 조항해 고용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최종 결정해 추후 개편안을 발표한다. /뉴시스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세계 희귀 가위가 전시된 가위박물관과 부채, 청자 등 5천여 점의 공예 예술품이 있는 명인명품관 홍보에 박차를 가해 전북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는 완주군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 자원봉사 일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등 활발한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행정자치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올해 주요사업과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를 확인하고, 센터 관계자 및 자원봉사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 다양한 계층으로의 자원봉사 문화 확대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진성 기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자에 교통비 지원'

70세 이상...도의회, 최찬욱 의원 대표발의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제정 추진키로

전북도의회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지난 4일부터 열린 제364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최찬욱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 10)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교통안전법에 따른 기본·시행계획 수립과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과 이에 따른 교통편의 지원 등을 위한 제반사항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한 것이 골자다.

조례는 전북도는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교통안전점검과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의 교통 편의를 위한 재정 지원, 교통안전 교육·점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70세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시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최찬욱 의원은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이다"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한 후에도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5년 2만3063건에서 2016년 2만4429건, 2017년 2만6713건, 2018년 3만1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전북지역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10만1814명으로 이중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수는 288명이다. /김진성 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